

# 진입로 좁아도 증·개축 가능

##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올해말 시행

진입로가 좁아 건축허가를 받기 어려웠던 전통신차도 앞으로는 증·개축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9월 23일 "전통신차의 진입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부적합할 경우라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중으로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올해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땅지에 위치하고 있는 전통신차들은 길이가 35m 이상인 막다른 도로에 접하고 있는 건축허가 시 너비 6m 이상(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에서는 4m)의 도로가 확보 되어야만 가능(시행령 제3조3)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전통신차들은 이미 몇 백년

전부터 존재해 왔기 때문에 현재의 건축법 적용에는 문제가 있다. 사찰에 이르는 진입로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지 않는 한 화재나 비상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도 진입로가 개설돼 있지 않아,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화재 발생 시 국가의 주요 국보·보물급 문화재 등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개선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전통신차의 진입로는 대부분 산길이나 등산로여서 증·개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사실상 받기 어렵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통신차의 건축허가 신청시에 건축법 적용의 완화를 신청하게 되면,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기준을 완화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불교계는 이번 국토해양부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전통신차에 대한 불합리한 건축 조건이 명시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 관계자는 "종단에서는 전통신차 진입로 확보와 관련 '건축법 시행령'은 물론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건축물 또는 공익물의 종류와 건축 또는 설치 범위 등의 개정을 요구해 왔다"며, "향후 건축법과 관련한 '전통신차 건축법 적용 배제, 전통신차 면적·높이 제한 완화' 등에 대한 법 개정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 점직금지 종무원법 통과...17개 안전 처리

## 조계종 제178회 임시중앙종회 폐회



9월 24일 개최된 조계종 제178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신임 종회의원 현은(왼쪽)스님과 현조 스님이 의원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박재원 기자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자승)는 9월 24~25일 제178회 임시회를 열고 점직금지를 규정한 '종무원법'을 통과시키는 등 1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종회에서는 종헌 개정과 종법 제·개정안을 주요 안건으로 다뤄 3개 법안(종무원법 개정안, 선원법 개정안, 종립학교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11개 법안은 차기 종회로 이월했으며, 1개 법안(사설사당 등록및관리법 개정안)은 철회했다.

제5교구 법주사 현조 스님과 직능 대표(선원) 현을 스님을 종회의원으로 선출한 이번 종회에서는 '종립특별선원 석남사 지정 해제 동의의 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불교미디어 관리위원회' 명칭을 '발전위원회'로 변경하는 안건도 원안대로 처리했다. '불기 2552년도 종정 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건은 종교편향과 관련 지역 역량을 결집하자는 의미에서 1년간 보류하기로 결의하기도 했다.

다음은 14대 중앙종회 전반기를 마감한 이번 임시중앙종회에서 다뤄진 주요 안건과 총결집의 내용이다.

◇ **선원법·종립학교관리법 개정**=선원법 개정안은 종헌에는 이미 규정된 '기본선원'이란 명칭을 종법에까지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종립학교관리법 개정안은 위원들의 소집 요구에도 위원장이 회의를 열지 않을 수 있는 난점을 해소하는 취지로 통과됐다.

◇ **원로의원 추천 등 인사안건 처리**=중앙종회는 원로의원에 종하, 월주, 월탄, 성파, 효경 스님을 각각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또 공석중인 재심회위원회에 대흥사 주지 범각 스님과 월정사 주지 정법 스님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사서실장 심경 스님과 지만 스님을, 종립학교관리위원회에 종회의원 일관 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중앙종회는 이와함께 선

진 스님과 혜정 스님의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또한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후보에 성본, 해남 스님을, 감사에 정인, 공운, 혜성, 경진 스님을 각각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 **승려 사후재산 중단귀속 문제**=종회의원 종성 스님은 총무부 총결집에서 "승려의 사후재산을 금지하고 환속 또는 제자, 사망시 이 재산을 종단에 귀속토록 하는 승려법이 2007년 9월 개정됐음에도 1년이 넘도록 행정부서인 총무원이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이 법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종단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총무부장 원화 스님은 "이 법을 적용하기에는 사회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많아 종헌 상에 승려

의 사후재산 축적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고 답변했다.

향적 스님은 "이 법의 근본 취지는 종단 소속 스님들이 비구계를 받을 때 유언장을 쓰도록 해 스님 사후에 재산권을 두고 친인척 혹은 문중간의 분쟁을 막고자 하기 위함이었다"며 "집행부는 이 법이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 **불교뉴라이트 기입 스님 문제 없나**=총결집에서 종회의원 정목 스님은 "기독교를 배경으로 성화운동을 주도한 뉴라이트연합에 가입한 스님들이 많다고 하는데, 해종행위에 해당되지 않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호법부장 정만 스님은 "그들이 해종행위나 승공실추 행위를 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상 기입이유만으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며, "뉴라이트연합과 불교뉴라이트는 다른 단체로 알고 있지만,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즉각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 **호법부장 "오보지만 참회"**= '이청수 경찰청장의 퇴진요구 철회' 논란이 담긴 호법부장 정만 스님의 일간지 인터뷰에 대해 종회의원 주경 스님이 해명을 요구하자, 정만 스님은 "기사가 오보이지만,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 참회한다"고 말했다. 정만 스님은 "어 청장을 비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청장과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도 없다"며 "하지만 책임질 것이 있다면 소인에서 물러날 뿐 아니라 관계까지도 각오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성우 기자

# 대구경북범불교도대회 11월 1일 개최

## 조계종 중앙종회·교구본사주지회의, 적극 지지

종교평화와 국민화합을 실현하기 위한 대구경북지역 범불교도대회는 11월 1일 대구에서 봉행된다.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은 9월 26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대구경북대회를 비롯한 전국 지역별 범불교도대회를 예정대로 봉행하기로 확정했다.

이 대회의 성격과 방향은 종단 집행부와 '대구경북지역 범불교도대회 봉행 소위원회'가 협의해 결정키로 했다.

이날 본사 주지스님들은 "사회통합과 각종 차별 철폐, 공동체 정신 회복을 위한 활동을 중단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각 지역별 대책위원회 출범을 순차적으로 계속할 것"을 결의했다.

본사 주지스님들은 8.27 범불교도대회에서 결의된 대정부 4대 요구사항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확인하고, 특히 '종교차별을 금지하는 법제도와 화 추진' 문제와 관련, "이번 정기국회까지 반드시 관련법을 개정해 종교편향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본사 주지스님들은 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27개 종단과 신행·포교단체, 불교NGO 단체가 망라된 범불교대책위와 지역별 범불교대책위도 조직키로 의견을 모았다. 범불교대책위는 △종교차별 금지법안 입법 및 종교평화를 위한 정책활동 △국민통합과 종교평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지역별 대책위 구성 지원 및 조직활동 △공직사회 종교편향 감시활동 △시민사회 인식 변화대회를 위한 연대활동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자승)는 9월 25일 제178회 임시중앙

종회에서 '대구경북지역 범불교도대회' 개최를 적극 지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중앙종회는 결의문을 통해 "우리 중앙종회의원 일동은 지난 8.27범불교도대회를 통해 결의된 대정부 4대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헌법정신 수호와 종교편향 종식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범불교도대회를 비롯한 권역별 범불교도대회를 적극 지지하며, 대회가 원만하게 성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우·가연숙 기자

진공청소·물걸레청소·구석청소 **마미로봇이 한방에 다 한다**

힘 들이지 않고 청소하는 물걸레 로봇청소기 **마미로봇**

대리점 문의 / 제품 구입 1588-7402

가격 : ₩ 275,000

www.mamirobot.co.kr

Mamirobot (주)경민메카트로닉스 NAVER

# "MB정권 종교편향은 계획된 복음공화국 시나리오"

## 범불교대책위, 성시화운동 사례 조사 발표

"MB정권의 종교편향은 복음공화국 시나리오에서 나온 것이다."

"헌법파괴 종교차별 종식 범불교도대책위원회"는 최근 <복음공화국을 꿈꾸는 계획된 시나리오-성시화운동>이란 보고서를 발행했다.

범불교대책위는 이 보고서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정부 내적 구성에서 개신교 편중인사가 보이고, 각종 성시화 기념관과 기독교 관련센터, 기독교 교도소 등 선교활동에 정부예산이 사용되고 있다"며 "이같은 사례는 성시화 운동의 연장

선인 정부복음화 과정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성시화 운동은 16세기 스웨덴 제네바에서 존 칼빈에 의해 시작됐다. 한국에서는 1972년 김준곤 목사(성시화운동 총재)에 의해 추진에서 처음 시작됐으며, 2001년 한국총리협의회가 결성되면서 전국 규모의 선교조직으로 발전했다. 최근의 대표적 성시화운동으로는 2004년 정장식 포항시장의 '시 예산1% 성시화운동 사용' 간중,

2007년 인천시 홀리클럽 소속 공직기관장 102명 '성시화운동 참여 연대발언', 2008년 오현섭 여수시장 '여수박람회 복음박람회 발언' 등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성시화 운동은 기독교공화국 건설이라는 배타적 이념에서 가장 큰 문제점을 드러낸다. 또한 국민세금, 행정인력이 특정 종교 선교 도구로 악용되는 점,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 파괴 등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범불교대책위는 종교차별감시센터를 통한 감시와 사례접수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 9월 22일 조계사 피신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9월 22일 오후 조계사로 피신했다.

이 위원장은 조계사 주변에 배치된 경찰의 검문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지난 7월 24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총파업을 지시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로, 이 위원장의 피신으로 조계사는 민주노총을 감싼다는 시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조계사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농성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이 위원장 피신까지 겹쳐 당황하는 분위기다. 노덕현 기자

**봉** 무문관 근본도량 천축사 무자년 가을산신대재 **행**

귀의 삼보하옵고 풍요로운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도봉산 산신님께 지극한 정성으로 재를 올리고 등불을 밝히는 무자년 가을 산신대재 7일기도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천축사 산신대재는 매년 봄, 가을로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으로서 국운융창과 국민안락을 발원하고 지혜와 복덕이 구축하여 아무런 장애없이 모든 일이 원만성취 되기를 기원하는 재일입니다.

7일간의 산신기도로 사업번창, 상업번영, 지혜총명, 학업성취, 각종시험 원만합격 등 각자의 원하는 바 모든 일들이 원만성취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간 : 10월 7일(음력 9월 9일) ~ 13일(매일 사분정근)

입재법회 : 10월 7일 오전 10시

- ◆큰스님 초청법문
- ◆살풀이 춤 공연

동참 : 1인 1등 5,000원

계좌번호 : 057-01-0591-272 (국민은행 / 예금주: 천축사)

기타문의 : 02)954-1474